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몽니'...야권, 오늘 탄핵안 처리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안 본회의 통과...국힘 의원 대부분 불참 한덕수 "여야 합의해오라"...민주 "韓, 내란 사태 핵심 임무 종사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7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고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지만, 조정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냈던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소장파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해져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복인·방조'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측 "계엄 선포 전 한덕수에 사전 보고"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계엄 건의 절차 밟았다...尹, 국민 통행금지 조항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해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고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중을 올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광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체포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포고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은 가능하다고 인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 1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며 "다만 체포자 명단을 전달 받았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예방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 임무는 정보사에, 국내 여론·선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내란 공익제보자 처벌 감경·면제"

특별법 추진...특조위 설치·포상금 지급·심리상담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의 포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계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군 초급 장교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30일부터 권영세 비대위 체제

국민의힘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전국위 소집 안건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 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진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